

☾ **대학생 31만 명에 학자금 융자**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학비 마련이 어려운 대학생 31만 명에게 7천 760억 원을 융자하고 이자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는 '2003년도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계획'을 2일 발표했다. 이같은 지원 규모는 지난해(6,580억 원)보다 17.9% 늘어난 것이며 혜택을 받는 학생 수도 지난해(27만 8천명)보다 3만 2천명(11.5%) 증가한 것이다. 융자 대상은 대학과 대학원, 산업대, 전문대, 원격대 학생이며 각 대학 담당 부서에서 학교장의 융자추천서를 받아 신청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와 함께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보증인을 세울 수 없을 때는 신용보증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1인당 융자액은 매학기 등록금(수업료+기성회비+입학금) 이내이며 상환 조건은 단기융자는 융자 후 2년간 균등 분할상환, 장기융자는 재학기간 거치(졸업) 후 7년간 균등 분할상환하면 된다. 융자금 이율은 연 9.5% 고정금리이며, 정부는 742억 원을 들여 이 중 4.25%를 지원할 계획이며 학생은 5.25%의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

☾ **'약대 6년제' 본격 추진**

한의사들의 '반대'와 약대생들의 '조속 추진 요구'에 치여 표류

했던 '약대 6년제안'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 중 '약대 6년제' 추진을 약속함으로써 보건 당국이 미온적 태도에서 '적극 추진'으로 입장을 선화한 데 따른 것이다. 당국은 또 '약대 6년제가 되면 약대생들이 한약 관련 과목도 이수한 뒤 한약사 시험에 응시해 한약 분야도 빼앗아 갈 것'이라는 한의사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기 위해 이것이 불가능하도록 관련법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일단 약대 6년제를 작년 10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의산업발전특별위원회(약발특위)'가 결정한 내용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2005학년도부터 2007학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의 모든 약대를 현행 4년제에서 6년제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교육부와 함께 교과과정 개편 방향과 인력 수급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내년 수능 점수 소수점 없앤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반올림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수능성적의 소수점 이하 표기를 2004학년도 시험부터 없애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장기원 교육부 대학지원국

장은 "내년 입시부터 대학과 수험생들에게 모두 정수형의 통일된 점수를 제공하기로 했다"며 "다만 문항의 배점을 정수로 통일할 것인지, 아니면 소수점 배점은 그대로 두고 점수 처리 과정에서 이를 정수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전문가들과 협의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원 국장은 소수점 이하 점수의 반올림 방식으로 피해를 봤다는 수험생의 구제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대입 전형에서 일괄 재사정은 불가능하다"고 말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포괄적 구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개별 대학에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사안별로 해당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대통령직인수위 보고 주요 내용**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교육인적자원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보고 내용은 참여와 자치를 통한 교육공동체 구현을 기반으로 ▲공교육 정상화 ▲대학역량 강화 ▲교육복지 실현 ▲능력중심 인적자원 개발 등 중점정책을 시행, '지식문화강국'을 구현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는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을 충

실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나 대학 교수회 법제화 등 논란의 소지가 많은 정책도 다수 포함돼 있고 막대한 소요 예산의 확보를 위한 교육재정 국내총생산(GDP) 6% 달성도 쉽지 않아 시행에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이 중 대학교육과 관련된 것을 요약).

◇ 대학 역량 강화

▲대학운영의 자율성·책무성 확대 : 국립대에 대학이사회를 두고 교수회를 법제화해 총장 중심의 폐쇄적 의사결정구조를 구성원과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총장 선출도 직선제 위주에서 간선제, 초빙제 등으로 다양화한다. 대학이사회는 학교운영의 기본 정책과 제정 등을 심의, 의결하고 교수회는 학생교육, 학사관리, 교원 정원 및 인사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역할이 나뉘지만 구성원간 참여한 대립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대학입시 자율화·다양화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조직·인원을 확대해 수능출제체제를 안정화하고, 문제은행식 출제와 수능 복수 응시 기회 부여를 검토한다. 그러나 수능 연 2회 실시에 대해서는 문제은행 체제 구축 등이 요구되는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

고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대학교육 질 제고 및 연구역량 확충 : 교수업적평가에 연구뿐 아니라 교육부문도 포함시키고 대학평가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대학평가전담기구 설립을 추진하며 두뇌한국(BK)21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통해 대학연구력을 강화한다.

▲지방대학 육성 : 지역 거점대학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권역별로 대학이 지역 산업체, 지자체, 연구소 등 산·관·학·연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역 발전을 선도하도록 유도한다. 지방대 육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와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등을 골자로 한 '지방대학육성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 능력중심 인적자원 개발

▲지식국가형 인적자원 개발 체제 구축 : '국가인력수급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인적자원 정보인프라를 통합, 인력 DB를 구축하는 '인적자원정보 인프라 구축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평생학습체제 구축 : 독학학위제와 학점은행제 통합방안을 강구하고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은행제를 시범 운영하며 '국가직

무능력표준제'를 도입, 능력중심의 인력양성 기반을 구축한다.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양성평등 인사제도를 확립해 대학 여교수와 관리직 여교원 비율을 높인다.

☾ 기술지도대학 100개 지정

중소기업청은 올해 1백 개의 중소기업기술지도대학(TRITAS)을 새로 지정한다. 중기청은 이 TRITAS 지정을 통해 약 6천 명의 교수와 대학생들이 대학 인근 지역에 있는 2천여 개 중소기업현장에서 기술을 지도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오는 2월 15일까지 참여 희망 대학에 대해 신청을 받는다. 지정 희망 대학은 각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번에 TRITAS로 지정받는 대학은 최고 3천5백만 원까지 기술지도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TRITAS 지도를 받는 기업은 기술지도 비중 30%만 내고 나머지 70%는 정부가 부담한다. 이 TRITAS 사업은 정부,대학,기업 간 삼각협력을 통해 중소기업현장의 애로기술을 타개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지난 '99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이 사업에서 지난해에는 1770개 중소기업이 1776명의 교수와 4140명의 대학생 및 대

학원생으로부터 기술 지도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이 사업을 통해 현장실습 및 지도를 한 대학생 중 20%에 해당하는 815명이 대학 졸업과 동시에 해당 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은 TRITAS 사업이 이처럼 업계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 ◇기계 ◇전기 전자 ◇화학 ◇섬유 ◇디자인 ◇정보화 등 다양한 업종에서 기술 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 **사립대 국고보조금 10%로 올리기로**

전국 4년제 사립대학에 지원되는 국고 보조금 비율이 현행 4.5%에서 10%로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 중 평균 68% 가량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등 재정난을 겪는 상당수 사립대들의 '돈가뭄'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사립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고 보조금 비율을 대학 전체 재정(운영 수입)의 4.5%에서 10%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상반기 중 안정적인 국고 제정 지원 내용을 담은 '사학진흥법'(가칭)을 제정키로 했다. 교육부 당국자는 "국고 보조금 비율이 10%로 늘어날 경우 사립대에 지원되는

국고 규모는 연간 9,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관련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국민 세금을 어떻게 사립대 재정을 위해 쓸 수 있느냐"는 반론도 나오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개혁 시민연대 관계자는 "사립대 법인이 해결해야 할 재정 문제를 국가가 떠맡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조세제도 개편 등을 통한 사립대 간접 지원을 늘리기로 하고 연말까지인 사립대 기부금 비과세 기간을 영구화하며 사립학교 수익용 기본 재산에 부과하는 각종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 **기초과학 육성과 과학기술인력 양성 토론회**

한국과학재단은 1월 20일 과학재단 학·연·산 연구교류동에서 '기초과학 육성과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대 윤순창 교수(주제: 기초과학연구육성)와 서강대 전도영 교수(과학기술인력 양성), 한국과학기술원(KAIST) 양지원 교수(과학기술 관련 조직 및 운영시스템) 등의 주제 발표에 이어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과학재단 관계사는 "기초과학 육성을 위해서는 효

율적인 연구개발 지원체제 구축과 우수한 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도 출된 내용을 새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이공계 대학생 학비 1,213억 무이자 융자**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이공계 대학(원)생의 학업 중단을 막기 위해 학자금 1,213억 원을 무이자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 대학원 대상은 자연과학 계열과 공학 계열의 신입생과 재학생 5만 2,400명이고 1인당 융자액은 매학기 등록금 범위에서이다. 단,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학, 보건, 간호 가정학 및 그와 관련된 전공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한국학술진흥재단을 사업주관기관으로 정해 수혜 대상 인원과 금액을 각 소속 대학으로 배정토록 했으며 1, 2학기로 나눠 지급될 융자금의 이자(연 9.2%) 93억 원은 전액 국고에서 보전키로 했다. 상환은 장기융자는 졸업 후 원금을 7년간 균등 분할상환하고 군 입대 및 졸업 후 미취업시에는 2~3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단기융자는 융자 다음달부터 2년 안에 원금을 균등분할 상환토록 했다.

☞ 내국인도 입학할 수 있는 외국 인학교 제주에 생겨

제주도에 내국인도 제한 없이 입학할 수 있는 외국인학교가 생긴다. 정부는 중앙청사에서 제주 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를 열어 오는 2011년까지 총 29조 4,900억 원을 투자해 추진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2월 초 대통령 승인을 받아 종합계획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국인의 외국인학교의 입학 자격 제한을 없애는 한편 국제 수준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대학의 설립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자율학교의 운영도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를 위해 연내에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 IT전문가 201명, 올해 대학 강단에 선다

정보통신부는 정보기술(IT) 인력양성을 위해 산업체와 연구소의 전문가 201명을 교수요원으로 선발하고 총 4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선발된 IT전문가 교수요원들은 △객원교수 23명 △대학IT연구센터(ITRC) 연구교수 15명 △겸임교수 89명 △프로그램 전문강사 74명 등이며, 3월부

터 전국 77개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한다. 올해 신규 요원은 89명이며, 경쟁률은 4대 1이다. 정통부는 대학에 2억 원, 전문대학에는 1억 원까지 객원(연구)교수의 경우 3,500만원, 겸임교수 1,500만원, 프로그래밍 전문강사 2,500만원까지 최장 3년 간 지원한다. 정통부는 지난 '98년부터 IT전문가 교수초빙사업을 시작해 학생들에게 현장감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43개 지방대 육성사업비 500 억 원 지원

교육인적자원부는 대전 배재대 등 43개 지방 소재 4년제 대학(산업대 포함)에 지방대 육성사업비 500억 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수도권 대학을 제외한 120개 지방대(지방 캠퍼스 포함)가 제출한 자체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해 선정됐으며 대학별 지원액은 7억~19억 5천 500만원(대학당 평균 11억 6천 300만원)이다. 대학별 지원 금액은 울산대 등 33개 사립대에 389억 6천 500만원, 경상대 등 4개 국립대에 42억 9천만 원, 한밭대와 진주산업대 등 2개 국립 산업대에 19억 5천 500만 원, 경운대 등 4개 사립 산업대에 47억 9천만 원 등이다. 지원대상 주요 사업은 배

재대 디지털 지식융합 교육환경 구축(19억 5천 500만원), 울산대학습능력증진센터 설립·운영(19억 5천 500만원), 홍익대 조치원캠퍼스 영상·애니메이션 테마파크 조성(16억 6천만 원), 포항공대 이공계 특성화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 대학원생 유치사업(12억 원) 등이다. 지방대 육성사업비 지원은 교육부가 지방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0년 12월 마련한 '지방대 육성대책'의 하나로 이번 지원금은 2002년도분이며, 2003년도분 500억 원도 지방대 사업계획 심사를 통해 지원된다.

☞ '외국박사' 인증제 추진

부패방지위원회는 최근 국립대 총장 및 사립대 이사장 등의 외국 학위 알선과 '학위 세탁'이 빈번한 것과 관련해, 외국박사학위 인증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부방위는 1월 28일 외국 박사학위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어 미국과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밝히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 부방위는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분야별 외국학위인증위원회를 구성해 외국학위에 대한 국가적 인증

기준을 선정하고 개별 학위취득자의 학위심사를 수행시키는 방안을 발표했다. 부방위는 또 외국 박사학위 취득자의 신고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짜 학위 신고 및 허위 내용 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기로 했다. 부방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한 뒤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과 교육부훈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할 방침이다. 한편, 부방위는 2001년 한해 동안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신고된 외국박사학위 논문 1,818편 가운데 한글로 작성된 논문이 135편에 달했고, 현재까지 교육부 인가를 받은 외국대학 분교는 한 곳도 없는 데도 비인가·부실대학의 통신판정 등을 악용해 학위취득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부방위는 또 학술진흥재단에 신고된 복수 학위수여자 58명에 대한 표본조사에서 정상적인 유학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학위를 딴 사람이 20명에 이르며, 이들 가운데 일부는 아프리카, 스리랑카, 필리핀 등에서 학위를 취득한 뒤 학위 관리가 허술한 미국의 대학에서 학위를 '세탁'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 신규사업 공모, 580개 팀 신청

지난해 종료됐던 BK21 핵심사업 후속의 신규 사업단이 선정돼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170억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 두뇌한국(BK) 21 신규사업 공모에 전국 63개 대학에서 580개 팀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학문 분야별 신청팀은 공학 분야가 226개로 가장 많았으며, 자연과학 146개, 사회과학 82개, 의·약학 61개, 농·수·해양 27개, 인문 20개, 예술·체육 13개, 복합 5개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는 연세대가 45개 팀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양대 42개, 성균관대 35개, 서울대 31개, 이화여대 28개, 경북대 27개, 고려대 23개, 부산대 22개, 인하대, 전남대, 서강대, 경희대 각각 20개, 전북대 17개, 중앙대, 충남대 각 16개 순이다. 교육부는 이들 신청팀에 대해 구성된 연구업적 및 과제 수행능력, 산학협동 계획, 교육과정 개선 및 국제협력 계획 적절성, 학문발전 및 경제사회 발전 기여도 등을 평가해 지원대상을 선정, 3월부터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분야별 지원액은 과학기술 분야 150억 원, 인문사회 20억 원이며, 사업팀별 연간 지원액은 인문, 사회, 예체능 분야는 7천만 원, 이학, 농림, 해양, 수산 분야 1억 4천만 원, 공학, 의학

분야는 2억 원 안팎이다.

● 산업 석·박사제도 검토

학문적으로 가치가 있는 기업체의 연구 프로젝트를 실행한 연구원에 대해 대학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산업 석·박사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국정과제 보고에서 산업지원부가 이공계 기피 해소 및 발전전략의 하나로 <산업 석·박사제도> 도입을 건의,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산업 석·박사제도>란 기업체 연구원이 대학에서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된 교과를 이수한 뒤 기업으로 돌아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연구 프로젝트를 완료하면 학문적 가치를 평가받아 학위를 받게 되는 제도로 일본 등지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교과이수와 연구활동 기간을 석사의 경우 '1+1년제', 박사의 경우 '2+2년제'를 기본으로 운영할 방침"이라면서 "특히 산업 현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학문적 가치 평가를 통해 산업과 학문간 유대를 강화하고, 산업계의 고등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산업 석·박사제도>의 도입 및 지속

적 추진을 위해 고등교육법 등 관련법에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방침을 정하고 최근 연구용역결과를 교육부에 보내 의견을 타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대학 교직과정 평가결과 발표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 122개 일반 대학의 교직과정을 평가한 결과, 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이화여대 등 40개 대학이 '우수'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서강대·한국외국어대 등 10곳은 가장 낮은 단계인 '개선요망', 서울대를 비롯한 성신여대·경북대 등 72곳은 '보통' 평가를 받았다. 평가에는 교육 전문가와 현장 교원 등 17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전국 122개 일반 대학의 교직과정 설치 학과 2701개에 대해 서면 및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했다. 평가 영역 및 점수는 교육과정 40점, 교수·학생 42점, 행·재정 및 시설 18점 등 100점 만점이다.

평가결과에서 우수는 85점 이상, 보통은 70~85점 미만, 개선요망은 70점 미만이다. 교육부는 개선요망 판정을 받은 대학들에 대해 지구노력계획서를 제출토록 했으며, 개선의지가 없으면 교직과정 설치 승인을 취소하는 등 행정 제재를 할 계획이다.

평가 영역별로는 교육과정에서

성균관대 등 34곳이 '우수', 동서대 등 71곳이 '보통', 서강대 등 17곳이 '개선요망'으로 평가됐다. 교수영역에서는 아주대 등 21곳이 '우수', 성공회대 등 74곳이 '보통', 강원대 등 27곳이 '개선요망'으로 평가됐다. 학생영역은 인하대 등 77곳이 '우수', 건양대 등 43곳이 '보통', 성결대 등 2곳이 '개선요망'이었다. 행·재정 및 시설 영역은 경성대 등 51곳이 '우수', 경희대 등 51곳이 '보통', 강원대 등 20곳이 '개선요망'으로 판정됐다.

● 장애인 고등교육 학습권 보장 방안 마련

정부의 장애인 복지 확충 정책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일선 대학의 입학 문호 개방과 편의시설 확충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전국 193개 4년제 대학 중 장애인에게 특별전형을 통해 정원의 입학울 허용하는 곳은 23.8%인 46곳에 불과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도 대부분 6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32개 국립대와 국립산업대 중에서는 서울대와 공주대, 제주대, 창원대, 충북대, 삼척대 등 5개 대학만 장애인 특별전형을 실시했다. 또 장애인을 특별전형하는 대학들도

매년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 학습환경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999학년도에의 경우 38개 대학이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1,032명을 모집했으나 실제 등록 인원은 309명뿐이었다. 작년에도 46개 대학에 모집인원이 1,097명이었으나 등록인원은 420명에 그쳤다. 고교 졸업자 중 장애인의 대학 진학률도 일반 학생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일반계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85.2%였으나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의 진학률은 20.9%에 불과했다. 대학의 장애인 편의시설도 크게 부족해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율은 34.6%에 그쳤으며, 장애인용 주출입구 접근로(57.8%), 출입구(59.1%), 경사로·승강기·휠체어·리프트(59.2%) 등도 설치율이 60%에 못 미쳤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대학 장애 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평가위원회'를 구성, 장애인 고등교육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한 뒤 장애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국·공립 교원 증원

오는 3월부터 국립대학의 전임 강사 이상의 교수가 989명 증원

되며, 공립학교의 중등교원은 5342명, 초등교원은 6840명 늘어난다. 정부는 2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국·공립학교 공무원 정원규정' 2개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수학교 교원 182명, 유치원 교원 153명,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등 교육전문직 인력도 80명 증원된다.

이와 함께 인적자원개발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교육 부총리, 행정장관, 과학기술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조실장 등으로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구성하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한 인천 교대를 경인교육대학교로 확대하는 '국립학교설치령' 개정안과 서울대에 국제대학원을 신설하는 '서울대학교설치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 지방 이공계 대학원생에 연구 장학금

지역 산학협력 기술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비수도권 대학의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장학금이 지급된다. 산업자원부는 지역전략산업 과제를 연구하는 지방대 석·박사 연구인력에게 올해 105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지역을 제외한 전

국의 지방 대학, 지방대와 기업이 공동연구팀을 구성하여 지역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개발과제를 연구할 경우 지원된다. 지원 규모는 100개 안팎의 과제에 대해 연간 1억 원 내외를 최대 3년간 지원하되 지원 금액의 50% 이상 또는 일정 금액을 석·박사 학생의 연구장학금으로 배정기로 했다. 예컨대 석사과정의 경우 월 40만원, 박사과정의 경우 60만원, 박사 후 연구생의 경우 125만 원 가량이 지급될 것이라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다만, 참여 기업도 연구비의 10~20%를 매칭펀드 형식으로 부담토록 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한국산업기술재단이 총괄하되 과제 및 사업자 선정 등 사업추진과 관련한 주요 사항은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 이공계 미취업자 연수사업 실시

이공계 대학 졸업자 가운데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연간 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현장 교육연수사업이 실시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공계 대학(전문대 포함)을 나와 직장을 갖지 못한 졸업생을 대상으로 산업기술연구소와 기업의 현장기술 교육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는 '산업기술연구현

장 교육연수사업'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행 계획에 따르면 전국의 산업기술 관련 정부출연연구소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한다는 방침 아래 2월 중 희망 연구소의 신청을 받아 5~7곳을 선정할 뒤 3월중 연수생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다. 산자부는 "교육·연수기관별로 100명 이상의 미취업자를 선발, 교육한 뒤 교육수료자 가운데 연수생을 뽑아 연구 현장과 관련기업에서 연구보조자 연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 및 연수는 단체교육과 연구현장 연수, 유관기업 연수 등 3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2개월 이상씩 1년 내에서 이뤄진다. 또 연수생에게는 단체교육 때에는 월 30만원, 연구현장·유관기업 연수를 받을 때는 월 50만원이 각각 교통비나 중식비가 포함된 연수수당 명목으로 지급된다.

☉ 사립대 내·외부 감사 강화

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대학의 재정 비리 예방과 학교 운영의 투명성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해 사립대 내·외부 감사 강화 방안을 마련,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사학법인 감사 때 반드시 점검할 내용을 담은

감사 중점확인 항목' 과 감사보고서 제출 규정 등을 골자로 한 '사학기관 감사 업무처리 유의사항'을 전국 사립대학에 전달. 이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감사 중점 확인 항목'에는 비리 소지가 있는 교비의 목적 외 사용, 공사비 과다 계상 지출, 수익용 재산(예금)의 유용 여부, 각종 계약 업무 적정 처리 여부 등을 포함했으며 감사보고서에는 '지적 사항 및 시정조치 계획'을 첨부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현재 입학 정원 500명 이상 대학만 법인 임원 감사 2명 중 1명을 공인회계사로 선임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500명 미만인 대학도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토록 권장하고, 이를 재정 지원을 위한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내·외부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감사가 허위 또는 누락 보고를 하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외부 감사가 불성실한 감사를 실시할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재를 요청하거나 학교법인 감사 업무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내부 '감사보고서'와 외부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는 2003 회

계 연도부터 결산서와 함께 완전 공개토록 했으며,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 감사에서 일정 기간 재정·회계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음이 확인된 법인은 사립대 종합 감사에서 재정·회계 감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 대학 이공계 장학금, 검정고시도 대상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부터 지원하는 194억 원의 대학 이공계 신입생 장학금 지급 대상에 검정고시생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에 따라 검정고시생, 중·고교 자퇴생은 제학 중 내신성적과 검정고시, 수능성적을, 고교 재학 경력이 없는 경우는 검정고시와 수능성적을 각각 고려해 장학금 지급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당초 이공계 기피현상 해소를 위한 장학금사업을 추진하면서 신청 자격을 고교 내신의 수학·과학 평균 석차가 상위 20%인 신입생 중 수능에서 수리·과학탐구 영역 모두 1등급(수도권)인 경우와 2등급(비수도권)인 경우로 제한. 내신성적이 없는 검정고시생들의 반발을 사 왔다.

☞ 교육전문대학원 내년 개설

내년부터 현장 교원들을 대상으로 실무중심의 '교육전문대학원제'와 '교육전문박사학위제(Ed.D)'가 시행된다. 교육전문대학원은 시범적으로 2~3개교에서 운영된 뒤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원 양성 체제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 대학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수·시설 등 기본 요건을 갖춘 대학에 교육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교육전문박사학위를 신설토록 했다. 다만 기존의 일반대학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관련 학술학위과정(Ph.D)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교육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대학은 교육대학원을 폐지토록 했다. 교육전문대학원에는 교육학 석사학위(Ed.M)와 교육전문 박사학위를 두되, 석사과정은 현직 교사의 편의를 위해 주·야간제로 운영하지만, 박사과정은 2년 4학기 이상의 수학 연한에 주간제로만 운영토록 했다.